

현대 스웨덴의 노동, 복지와 정치

신 광 영*

1. 문제제기

이 글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정치경제에 대한 국내외 비판적인 분석 전통과 필자 개인의 스웨덴 연구의 궤적을 통해서 필자의 스웨덴 연구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를 성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비판적 사회과학계의 연구 흐름의 변화를 다루는 지식사회학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와 필자 개인이 속한 학계와 연구 집단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생애사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한 연구자의 연구 이력은 당연히 연구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문제의식은 당시 학계의 주된 관심과 연구자가 속해있는 동료 집단이나 조직의 영향을 받아서 당대의 연구자들이 공유한 관심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 개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은 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사회정치적, 역사·제도적 맥락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연구가 거시적인 학계의 흐름이나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개인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왜 그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자 하는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회과학 연구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문제제기와 연구 질문의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중요성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연구자의 평생에 걸친 연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를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스웨덴에 대한 관심도 필자의 대학원 시절 사회과학계의 흐름과 연구조교로서의 개인적인 경험 등과 관련되어 형성되었다. 1980년대는 68세대의 진보적인 흐름이 미국의 대학원과 학계에 변화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 시기였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와 70년대 반전평화운동, 민권운동, 여성운동 등이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다(Burawoy, 2022). 기존의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고조되면서, 보수적인 사회과학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미국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회과학 이론이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있는 일반이론이라는 미국 중심적인 사회과학관이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더욱이 1990년대부터는 미국을 다루는 연구가 보편적인 이론이라는 인식이 세계화와 더불어 더욱 기반을 잃기 시작했다. 둘째, 기존의 미국 사회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이론들이 배척되고, 미국사회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비판적인 사회과학이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었다(Gouldner, 1970). 보수적인 이론들은 전문성을 내세우며, 대중적인 불만과 사회문제를 도외시하였다. 비판적인 접근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불평등, 엘리트 지배, 군산복합체,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1930년대 미국 정치사에서 ‘개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면, 1970년대는 미국 학문의 역사에서 ‘진보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사회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넘어서,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사회학에서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으로 가시화되었다 (Burawoy, 2005).

2.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 정도와 구조가 다른가?

1980년대 중후반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

서, 당시 대학원 분위기는 오늘날과 상당히 달랐다. 68세대의 영향력이 강하게 유지되었던 시기였고 진보적인 신진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사회학 대학원 교육에서 비판적인 흐름이 자리를 잡던 시기였다. 특히 위스콘신대학교는 베트남전 반대운동이 극심했던 대학이었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대학원 과정에서 개인적인 변화는 지도교수였던 Erik Olin Wright 교수의 연구조교(RA)가 되면서 지도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인 “계급구조와 계급의식 비교연구(The Comparative Project on Class Structure and Class Consciousness)”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가톨릭 대학의 조돈문 명예교수(2019년 은퇴)와 같이 Wright 교수의 연구조교가 되면서 스웨덴 연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논의에서 계급에 관한 추상적인 논의는 많지만, 현대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이론적인 논의와 경험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이 이념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계급론을 재구성하고, 계급구조와 계급의식을 경험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였고, 계급구조와 계급의식 비교연구는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다(Wright, 1989). 미국과 스웨덴이 모두 발전된 산업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계급구조와 계급의식이 대단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그것은 산업화 수준이나 산업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운동과 계급정치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을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여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

당시 스웨덴은 미국 진보 학계에서 새로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스웨덴은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스웨덴에서 시도된 평등주의적인 개혁들은 대단히 혁신적이었다. 당시에 정치적 쟁점이 된 대표적인 정책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공동결정제도(Medbestämmandelagen, MBL)(1976)”와 사적 소유체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소유’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한 “임노동자기금(Lontagarfonder)”(신정완, 2012; Åsard, 1980)에 의해서 대표된다. 임노동자기금안은 사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임노동자 기금으로 이전하여 사회적 소유기업으로 전환하자는 안이었다. 이는 자본가 계급의 저항과 보수당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1976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패배하면서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가, 1982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하면서 약화된 형태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1년 보수당이 선거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보수당 정권이 임노동자 기금을 학술연구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폐기되었다.¹⁾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정치학자 스티븐스(John D. Stephens)의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Socialism*(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저서에서 분석적으로 다루어졌다(Stephens, 1979). 대안적인 사회체제와 제도에 대한 열망에서 스웨덴의 복지제도, 노동자 경영참여와 임노동자 기금 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60년대 운동의 시대가 진보적인 연구자들이 형성되는 시기였다면, 1980년대는 진보적인 학술적인 연구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스웨덴에 대해서 사전적인 지식은 거의 없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체제와 복지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스웨덴에 대한 정치와 복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놀라움이 연속된 시기였다.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에스핑-앤더슨(Gosta Esping-Andersen)의 논문이 1985년 *Politics against Market*(시장에 반하는 정치)로 출간되었다. 사회민주당, 노동조합과 복지와 노동정책 차원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비교하는 저서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본격적인 저작으로 미국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곧 이어 에스핑-앤더슨은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3가지 복지 자본주의)(1990)를 출간하여 세계적인 학자로 떠올랐다. 에스핑-앤더슨이 1970년대 국가론에 관한 논

1) 사회적 소유는 1970년대 초 LO의 경제학자 마이드너(Rudolf Meidner)가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와 국가 소유에 기반한 소련식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3의 소유 형태로 개인과 국가가 아닌 집합적 소유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연대 임금 제로 인하여 이윤이 높은 기업들은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주게 되면서 초과이윤이 발생하여 자본 집중이 더 심해지는 현실 과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임노동자 기금에 관한 논의는 Meidner(1976), Pontusson & Kruvill(1992)와 신정완(2016)을 참조할 것. 이러한 시도는 2020년 미국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였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미국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문을 썼고, 이를 복지국가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복지레짐을 탈상품화와 계층 차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는 복지국가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도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1988년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도 연구 프로젝트에서 분석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쓰게 되었다. 왜 미국, 일본과 스웨덴의 불평등 정도와 불평등 구조가 다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노동조합의 임금전략과 노동계급의 권력자원 동원을 개념화한 “생산의 정치(politics of production)”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밝혔다. 미국에서 등장한 내부노동시장론이나 일본의 이중경제론은 특수한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며,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스웨덴 노동시장 제도에 관한 논의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혔다. 노동시장 분절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본과 노동시장 분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스웨덴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인 미국을 서로 다른 “생산의 정치”가 작동하는 다른 유형의 산업자본주의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2001년 홀과 소스키스(Hall & Soskice)가 제시한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결론은 유사하지만, 필자의 논문은 미국, 스웨덴, 일본 서로 다른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Hall & Soskice, 2001).

3. 스웨덴의 사회변동과 정치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시기, 스웨덴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80년대 변혁 운동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었고, 사회민주주의 대신에 민중민주주의가 관심을 끌었다. 민중민주주의는 이념적인 차원의 논의라면, 사회민주주의는 이념을 제도화한 현실 체제 수준의 논의로 다른 차원의 논의였지만, 민중민주주의가 더 주목을 받았다. 1989년 12월 16일 숭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사회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 심포지움에서 필자는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발표하고, 최장집 교수(고려대)가 “민중민주주의의 구상”을 발표하였다(기독교사회연구소, 1990). 강력한

노동조합인 LO가 개혁 주체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지지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민주당이 민주적인 합의 정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스웨덴 모델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지속가능하게 했던 것은 전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현실 제도와 전략보다는 주로 이념과 원리에 관한 논의로 이루어졌다. 민중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중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나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1980년대 말 전 지구적으로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1989~1991년에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가 되고, 평화적으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소련의 고프바초프에 의해서 시작된 개혁과 개방은 동유럽 공산정권의 해체로 귀결되었고, 동유럽 사회들은 국가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시민혁명’은 시민사회론을 부활시켰다. 경제적인 이익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들의 연대와 관심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결사체들의 역할이 동유럽 이행과정에서 결정적이었던 사실에서 시민사회론이 부활하였다. 국가나 시장과는 다른 사회 구성 요소로서의 시민사회는 동유럽 체제 전환의 동력이자, 향후 동유럽 민주화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체제도 위기를 겪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금융위기를 겪었다. 핀란드는 동구권과의 무역이 축소되면서,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스웨덴은 1980년대 사민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규제 완화로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 1982년 재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은 집권 기간 동안 금융 규제개혁을 단행하였다. 1985년 금융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1989년에는 정부의 외환 관리를 폐지하였다. 금융시장의 규제개혁으로 금융기관들 사이에 대출 경쟁이 일어나고, 해외자금이 스웨덴으로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거품경제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1991~1994년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스웨덴도 IMF 구제금융을 받아 희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업률은 1990년 2.3%에서 1993년 10.1%로 높아졌다.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전환으로 혼란을 겪을 시기에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체제도 대혼란을 겪었던 것이다. 유럽의 경제 대국인 독일도 동서독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후유증으로 고실업과 경제침체를 겪었다. 유럽 대륙과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영미식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유일한 경제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인식은 1996~1997년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더욱더 영미식 신자유주의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TINA(There is no alternative)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영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제시한 ‘사회투자국가’와 ‘제3의 길’ 논의를 제시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아닌 대안적인 사회모델을 제시하여 대안 사회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기든스의 제3의 길 논의의 실제적 근거가 북유럽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스웨덴이 서구 좌파의 논의에서도 크게 주목을 끌게 되었다(Giddens, 1998). 기든스는 기존의 자유 시장주의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모두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혁신된 사회민주주의의 형태로 ‘제3의 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사례는 21세기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복지와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키는 사회투자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의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을 높이 평가하였다.

국내 학계에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주로 2000년대 들어서 복지와 관련하여 더욱 뚜렷해졌다. 정치권에서 복지와 복지제도에 관한 관심은 매우 낮았지만, 높은 자살률, 높은 빈곤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와 초저출산율 등 사회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점차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이동성 제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웠다(기획예산처, 2007).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북유럽과 스웨덴이 한국사회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다. 그리하여 스웨덴에 대한 관심도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스웨덴 복지와 노동체제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웨덴은 점차 사회정책과 노동운동 논의 더 나아가 대안 사회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신정완, 2016).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스웨덴 관련 저서들이 많이 출간되면서, 스웨덴은 좀 더 가까운 나라로 인식되게 되었다(대표적으로 김인춘, 2007; 변광수, 2007; 신광영 2015; 신정완, 2012; 신필균, 2011; 안재홍, 2013; 이현근, 1999; 조돈문, 2019; 주은선, 2006; 최연혁, 2012). 후발 복지국가인 한국에서 스웨덴 복지체도를 논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치적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바람직한 제도 자체만을 논의하는 것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관점에서 한국의 현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과 대안적인 모색의 가능성을 스웨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의가 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2000년대 스웨덴 복지와 노동은 이미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어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고유한 제도적 특징을 많이 잃어버렸다. 1980년대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체도와 노동체제가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겪으면서, 197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었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고유한 제도적 특징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것은 스웨덴식 ‘점진적 신자유주의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급격하게 이루어졌지만,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는 스웨덴 자본주의 변화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정치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간 스웨덴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던 스웨덴 시민당의 헤게모니는 1976년 이후 1976년 이후 보수당이 여러 번 정권을 차지하기 시작하여 총 17년 동안(1976~1982, 1991~1993, 2006~2014) 국가권력을 장악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다. 보수정당 집권 시기 시장 중심의 개혁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1983년 스웨덴 금속노조와 엔지니어링 경영자협회가 전국 수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산별 수준의 단체교섭을 시도하면서, 3단계 단체교섭체제(전국, 산업별, 기업별 교섭)를 바탕으로 했던 스웨덴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만들어 냈다. 또

한 “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며 의료, 교육, 간병 서비스 등에서 민간 부문을 확대한 보수당의 개혁도 국가의 영역을 줄이고, 시장의 영역을 계속 확대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신정완, 2022; Dahlgren, 2014; Lars and Stone, 2015).

4. 불평등, 노동과 복지, 정치

필자의 스웨덴 연구는 출판 계약 취소에 영향을 받았다. 92년 두 권의 책을 출판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 1994년 첫 번째 책을 출간하고, 두 번째 책으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출판하기로 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 먼저 출판 계약을 취소하자는 제안을 하는 바람에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책 출판계획은 무산되었다. 책 2권의 출판과 두 번째 책으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출판하자고 출판사가 먼저 제안해서 출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시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동구권 붕괴로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책은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추측한다. 시대 변화를 먼저 읽고 그에 대응한 출판사의 기민한 대응이었다고 짐작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스웨덴 연구는 한동안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졌다. 1989년 스웨덴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논문을 쓴 이후 “스웨덴 노사관계와 신기술”(1992)과 “노동시장과 계급정치: 스웨덴 모델의 미래: 사회민주당의 계급연합 전략과 지기 기반의 변화”(1998), “스웨덴 공공부문 임금결정: 제도를 중심으로”(2010) 등 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약화 현상 중심에는 정치적인 변화가 핵심적인 요소라는 판단하에 스웨덴 정치 전반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2006년 보수 정권으로 권력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보수정당들의 선거 전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민당 헤게모니하에서 어떻게 보수정당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집권 사민당의 경제적 성과는 두드러졌고, 사민당이 2006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

이다. “스웨덴 사회민주체제 하에서의 보수 정당들의 정치 전략 연구: 2000 년대를 중심으로”(2012)는 영국과 미국의 보수당들과는 달리 “복지축소 없는 자유화”를 선거 전략으로 내세워 스웨덴 복지서비스의 경직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득표에 성공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더 큰 정치적 지각변동은 스웨덴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이다. 스웨덴 민주당이 2010년 의회에 진출하면서, 스웨덴 정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판단하에 스웨덴 극우 정당이 지지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스웨덴 총선 출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스웨덴 정치의 극우화를 다루었다: “스웨덴 정치체제의 변화”(2014), “스웨덴 극우정당의 사회적 기초”(2015), “왜 스웨덴에서 극우 정당이 급부상 하는가?”(2016). 스웨덴은 평등과 연대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나라라는 통상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배제와 차별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스웨덴 민주당의 급부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는 스웨덴 내부의 변화보다는 유럽연합(EU) 가입에 따른 역내 이민 증가와 2015년 난민 사태로 인한 대규모 외국인 이민자와 난민자들의 유입에 따른 변화라는 점을 다루었다. 세계화의 유럽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럽연합의 탄생은 시장통합을 앞세운 경제통합이었고, 고용과 복지 등 같은 사회통합에 필요한 요소들은 등한시 되었다. 그 결과 세계화의 피해자들인 저임금 노동자들과 빈곤층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가 폭증하였다. 그리고 유럽 통합을 진보적인 변화라고 부르짖는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폭발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의 지지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Camus & Lebourg, 2017; Mudde, 2007).

그 결과, 21세기는 사회민주주의 시대가 아닌 극우 민족주의의 시대가 되고 있다. 2022년 총선에서 제2 원내 정당으로 부상한 스웨덴 민주당 (Sverigedemokraterna)은 더 이상 주변적인 정당이 아니라 기존 보수 정당들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아서 보수 정당들과 정책 연대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서 스웨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2010년 총선에서 기존 보수정당들(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은 네오-나치에서 출발한 극우 정당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과는 달리 2022년 선거 이후 이들

정당들은 연정 구성에 스웨덴 민주당을 참여시키지는 않았지만, 소수 보수 연정에 참여하는 3개 보수정당들(보수당, 자유당, 기독교 민주당)과 스웨덴 민주당 사이의 정책 연대를 2022년 10월 14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가 없이는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기존 보수정당들의 지지는 줄어들고, 극우 정당의 지지는 급격히 높아지는 현실에서 스웨덴 민주당은 스웨덴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은 스웨덴뿐만 아니라 북유럽(핀란드, 덴마크와 노르웨이), 서유럽(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웨덴)과 동유럽(폴란드와 헝가리)을 망라하여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집회(Rally National)는 41%의 지지를 받았고, 헝가리의 피데즈(Fidesz), 이탈리아 형제당(Fratelli d'Italia), 폴란드의 법과정의당(PiS)은 2022년 선거에서 제1당이 되어 집권에 성공하였다. 이탈리아의 형제당은 다른 극우정당들(Lega(동맹)와 Forza Italia(전진 이탈리아))과 극우정당 연정을 구성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들 극우 정당들은 유럽연합 탈퇴, 이민, 난민, 이슬람 반대 노선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왜 반유럽연합 정서가 스웨덴에서 넓게 확산되었나? 스웨덴 민주당 당수 이미 오케손(Jimmi Åkesson)은 2022년 총선에서 “선거는 대량 이민과 복지 사이의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스웨덴 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을 구분하고, 스웨덴 노동자들의 복지가 이민자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고, 스웨덴의 제도권 정치인들이 그러한 결정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년 총선에서 블루칼라 노동자의 32%가 사회민주당을 지지했고, 29%가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했다. 나머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가 보수당 14%, 좌파당 9%, 기독교 민주당 5%, 중앙당 4%, 녹색당 4%, 자유당 2%으로 분산된 것을 고려하면,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https://www.svt.se/datajournalistik/valu2022/valjarstrommar/>, 검색일: 2023.04.18.). 이러한 배경에는 유권자 계급과 기존 정당들 간의 연계가 급격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대신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사회변동에 따른 반응이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2)

5. 데이터 혁명과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책과 제도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는 증거기반 정책의 전통이다. 정책이 단순히 이념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책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실증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교육, 고용, 소득, 건강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의 토대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 문제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30년대 스웨덴 인구위기를 둘러싼 논쟁에서 군나르 뫼르달(Gunnar Myrdal)의 접근은 과학이 정치를 지배해야 한다는 점을 잘 대변하고 있다(신광영, 2016; 신정완, 2017; Barber, 2008). 뫼르달은 인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출산이 불평등을 심화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평등과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가족복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성평등을 원리로 하는 가족복지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스웨덴 복지자본주의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각종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복지국가는 통계국가이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통계는 근대 국가 형성기에 중앙 국가가 징병과 과세를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인이 될 수 있는 인구를 파악하고, 근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소득과 경제활동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Statistics는 state가 수집한 정보를 의미했다. 오늘날 복지국가는 다양한 통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현대 국가는 인구, 출생, 사망, 고용상태, 건강상태, 교육정도, 일자리 이동, 소득수준과 소득이동, 과세 기준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흡연이나 건강 행동과 같이 상태가

-
- 2) 이러한 변화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스웨덴 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오랜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Hagevi, 2022)에서부터 이민 반대와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에 따른 최근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Bo et al., 2023)까지 다양하다.

아니라 개인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통계국가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통계 체계는 정부 행정기관들이 행정 목적으로 수집한 통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행정데이터 체계이다. 스웨덴은 일찍이 1968년부터 개인의 주요 기록을 등록하는 개인등록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데이터 체계를 구축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등록부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변화를 데이터화 하여 복지행정에 사용하고 있다.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시작 날짜와 재취업 정보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고, 이는 실업자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고용통계에서 수집이 된다. “스웨덴 행정데이터 통합과 활용에 관한 연구”(2017)는 이러한 스웨덴의 행정데이터 체계의 형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를 담고 있다.

복지국가는 학술적인 이론이나 정치적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행정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스웨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지원 대상을 소득 분위 70% 이하로 한다는 점을 공표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국민 소득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70%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었다. 전국민 소득 자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간과 시기에 따라서 소득은 달라지고, 또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등 소득 원천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득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행정데이터를 일찍부터 구축하고, 이를 복지정책과 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행정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구축되면,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센서스와 같은 대규모 조사가 불필요해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센서스는 비용과 인력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국가적 조사이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통합행정데이터체계를 구축하여 센서스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에서 복지정책 논쟁이 증거기반 사회정책이라는 새로운 흐름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은 통합 행정데이터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6. 비교사회학적 관점

필자의 스웨덴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20세기 후반 학술 연구의 세계화 추세와 맥을 같이 하였다. 세계화의 학술적 차원은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등장한 이론이나 연구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적인 역사적, 제도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 확산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사회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다른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까지 비교연구는 사회과학의 주류가 아니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비교연구나 비교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의 디폴트가 되었다. 이것은 ‘사회이론의 지역화’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이론의 지역화는 특정한 사회이론은 그 이론이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제도적, 역사적 맥락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과 정책들은 사회과학에 많은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스웨덴 연구가 필자의 사회학적 탐구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중 노동시장(노동시장분절)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은 스웨덴 연구를 통해서 얻은 중요한 점이었다. 노동시장의 분절은 노동조합의 전략과 기업의 고용전략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노동과 고용 관련 법과 제도의 산물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연대임금 전략을 추구한 스웨덴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노동시장의 분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노동시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스웨덴에서도 노동자들의 격렬한 노동권 투쟁은 193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31년 5월 14일 오달렌(Ådalen)의 목재공장 파업에서 군대가 파업 노동자들에게 발포하여 5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임금 삭감에 반발하여 파업을 일으킨 펄프공장 노동자들에 대항하여 기업이 파업 파괴자들을 고용하자, 근처 노동자들이 동조 파업을 일으키면서 군대가 동원되었고, 파업 노동자들과 군대가 충돌하면서, 발포가 이루어졌다.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이었다. 1932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1938년 살츠베바덴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계급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스

웨덴은 유럽에서도 노사갈등이 극심했던 사회였다(Molinder et al., 2023).

북유럽 학자들의 권력자원론은 북유럽에서 노동계급의 권력이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사갈등이 적고, 평등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정책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제도적 사실을 다룬다(Myles & Quadagno, 2002; O'connor & Olsen, 1998). 왜 노동조합이 강력한 스웨덴에서 노사 분쟁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노사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 조직과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스웨덴 사례는 계급갈등과 계급타협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이다. 권력자원론은 파업과 노사관계에 대한 영미식 노사관계론 접근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적 요소가 노사관계에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스웨덴 복지제도는 복지가 평등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가족복지를 통해서 성 평등과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 가구 모형’을 전제로 하는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은 ‘남성 가장 가구’를 전제로 한 한국의 복지정책의 한계와 그에 따른 저출생 위기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출산, 육아와 보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족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스웨덴이 세계적으로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높은 출산율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역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은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고 출산율도 낮은 예외적인 사례이다.

스웨덴 모델의 여러 가지 특징은 보편적 복지제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사후적으로 실업보험을 통해서 실업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실업의 예방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사회체제에 대한 논의는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나 복지국가 다양성 논의를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광의의 “스웨덴 모델”은 여러 사회과학 논의의 준거가 되었다.

석유과동 이후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변화는 기존의 국민국가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변동과는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한다.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스웨덴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들이 나타났다. ‘점진적 신자유주의화’라고 불릴 수 있는 점진적인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영미식 빅뱅 형식의 급진적인 신자유주의화와는 다른 제도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합의 정치’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대신에 다양한 정당들이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정치적 전통을 의미한다. 표결 대신에 타협을 통한 정책 조정으로 인하여 급진적인 우파 개혁이나 좌파 개혁이 시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정치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시작된 임노동자기금을 둘러싼 갈등과 2010년대 중반 이민과 난민을 둘러싼 갈등으로 합의 정치의 퇴조를 보여주고 있다. 노사관계의 변화와 교육, 의료, 돌봄서비스의 자유화를 통한 부분적 민영화 그리고 최근 NATO 가입 시도 등으로 스웨덴만이 지녔던 제도적 특징들이 많이 약화되었다. 스웨덴의 이러한 변화도 비교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변화들이다. 북유럽 4개국 중에서 스웨덴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스웨덴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하는 정도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보다 훨씬 더 낮았다(OECD, 2021, p. 35, p. 52). 타인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스웨덴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OECD, 2020, p. 237).³⁾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의 보통국가화라고 불릴 수 있다. 보통국가화는 사회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회에서 다른 유럽 사회와 비슷해지는 변화를 의미한다.

3) 스웨덴의 불평등은 북유럽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20년 지니계수는 노르웨이 0.263, 핀란드 0.265, 덴마크 0.268(2019년), 스웨덴 0.276 순이었다. 스웨덴의 불평등은 슬로바키아 0.222(2019년)나 슬로베니아 0.246보다 훨씬 더 심했다. 빈곤율도 높아졌다. 2020년 빈곤율은 핀란드 0.057%, 덴마크 0.065%, 노르웨이 0.084%, 스웨덴 0.088% 순으로 스웨덴이 가장 높았다. 스웨덴 빈곤율은 프랑스 0.083%나 네덜란드 0.083%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검색일: 2023.04.03.).

7. 맺음말

필자의 학문 이력에서 스웨덴과의 조우는 지난 30여 년 동안의 학문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도교수 프로젝트의 연구조교로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과는 전혀 다른 사회인 스웨덴의 노동조합운동, 노동시장, 고용체제, 복지와 사회민주당의 전략 등에 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분석하게 된 미국, 스웨덴과 일본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따라서 근로소득에 미치는 기업 조직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박사 논문도 썼다. 비교 자본주의 체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한 비교사회학적인 접근 논문이었다. 이론적인 수준에서만 계급과 불평등 문제를 다루었던 데서 벗어나 구체적인 근로소득 불평등 구조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교수 프로젝트에 연구조교로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스웨덴은 필자의 사회학 연구의 큰 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위스콘신대학교에는 ‘스칸디나비아 학과’와 ‘스칸디나비아 연구소’가 있어서, 대학 도서관에 북유럽 자료들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스웨덴 모델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요스타 렌(Gösta Rehn)과 루돌프 마이드너(Rudolf Meidner)가 1951년 공동으로 집필한 *The Trade Union Movement and Full Employment*(노동조합 운동과 완전고용)과 같은 역사적인 자료도 접할 수 있어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형성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위스콘신대학교 도서관은 세계 여러 나라 저서들과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어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위스콘신대학교 도서관은 세계 여러 나라 자료의 보고였다.

스웨덴 연구를 통해서 얻은 사회학적 통찰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체제 형성을 통해서 정치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다. 사회변화와 개혁을 추동하는 것은 정치이다. 정치를 통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일단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 선호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제도에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제도의 규범과 규칙을 내면화하여 제도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사람이 집단적으로 정치를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 스웨덴에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출산율이 동시에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 평등적 가족복지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그리고 LO의 연대임금 정책이 주변적인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이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졌고, 2007년 보수당 정권의 실업 보험율 인상으로 LO 조직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둘째, 과학이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가 근거 없는 신념이나 잘못된 현실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면,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사회를 퇴보시키고 더 혼란스러운 상태를 야기할 것이다. 경험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나 이념이 우선하여 근거가 없는 주장이 이루어지고 정책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에서 유래한다. 또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강조하는 증거기반 사회정책에서도 과학적인 분석과 처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스웨덴 사회체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전략 선택이 사회 개혁에서 중요하다는 점이다. 스웨덴 노동운동의 성과는 단기적인 조합원의 임금 극대화보다 연대임금을 통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상시켜 노동계급 연대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LO는 노동시장과 선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LO는 연대임금을 통해서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임금안정과 물가안정을 가져와 집권 사민당의 경제정책에 크게 기여했다. 노조가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단순히 임금에만 관심을 갖는 조직이 아니라 저임금 해소와 동시에 국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스웨덴 연구가 한국과 동아시아의 계급 불평등, 노동과 복지를 연구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2차 대전 직후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스웨덴보다 더 높았다. 1949년 일본의 노조조직률은 55.8%로 스웨덴의 50.2%(1950년)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운동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고, 노조조직률은 2019년 16.8%로 더 낮아졌다. 반면 스웨덴 노조조직률은 2019년 65.2%로 대단히 높았다. 대단히 다른 노동운동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기 노

동조합 지도부의 조직과 운동전략이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웨덴 사회체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동아시아 사회들을 비교적인 시각에서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대학원생 시절 갖게 된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인식은 이제 스웨덴이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하나가 되는 보통국가화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수정되었다. 1970년대까지 스웨덴 사민당과 LO가 보여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보수당의 집권과 함께 영미형 신자유주의적 정책 노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스웨덴은 보통의 유럽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아직도 다른 나라와는 다른 사회민주주의 사회체제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에서 새로운 혁신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적극적인 대안에 대한 모색과 진취적인 시도가 사라지면서, 이제 스웨덴 사민당도 혁신을 선도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존 사회체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보수 정권으로의 교체가 잦아지면서, 나타난 방어적인 태도에 기인한 점도 있다.

더구나 19세기와 20세기 산업사회의 계급 구조에 기초한 좌우파 정당 체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균열인 내부자(스웨덴인)와 외부자(이민자) 구분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 스웨덴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내세우는 극우 포퓰리즘의 급부상은 20세기 정당 체제를 허물고 있다.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은 기존 정당과 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와 SNS를 활용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근대 이전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이 첨단 ICT 기기를 활용하여 부활되고 있고,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지털화와 개인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분산되고 고립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 담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객관적인 현실 인식과 실현 가능한 정책의 모색도 프레이밍을 공유하였을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스웨덴 민주당의 급성장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담론과 대중의 심리를 동원하는 효과적인 정치전략에 기인하고 있다. 스웨덴의 미래는 현재의 정치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스웨덴에서도 현재 상태의 진보를 재구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 기독교사회연구소(1990). 『사회발전연구 1』. 파주: 한울.
- 기획예산처(2007). 양극화 해소·민생 정책 효율성 높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7.7.19.)
- 김인춘(2007). 『스웨덴 모델: 독점 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승희(2007).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파주: 양서원.
- 변광수(2007). 『복지국가 스웨덴 사람들』. 파주: 문예림.
- 신광영(1991). “스웨덴 사회복지의 형성과 특징”. 『비교사회복지』 1, 135-184.
- 신광영(1994).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60년: 성과와 한계”. 『사상』 40, 40-75.
- 신광영(2000). “스웨덴 계급타협의 형성과 위기”. 『한국사회학』 30, 63-81.
- 신광영(2010). “스웨덴 공공부문 임금결정: 제도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11, 65-80.
- 신광영(2012).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보수정당들의 정치 전략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13, 65-94.
- 신광영(2014). “스웨덴 정치 체제의 변화: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을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15, 143-170.
- 신광영(2015).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 복지과 정치』. 파주: 한울.
- 신광영(2016). “사회민주주의 복지 사상: 뫼르달과 에스핑 안데르센을 중심으로.” 김윤태. 『복지와 사상』. 파주: 한울아카데미.
- 신광영(2016). “왜 스웨덴에서 극우 정당이 급성장하는가?” 『스칸디나비아 연구』 18, 1-30.
- 신광영(2017). “스웨덴 행정데이터 통합과 활용에 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20, 83-108.
- 신광영(2017). “유럽화와 스웨덴 노사갈등: 라발 사례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19, 97-118.
- 신정완(2012). 『복지 자본주의나 민주적 사회주의나: 임노동자기금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서울: 사회평론.

- 신정완(2016).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모델과 스웨덴 모델”. 『스칸디나비아 연구』 17, 1-37.
- 신정완(2017). “1930년대 스웨덴 인구문제 논쟁에서 제시된 뮈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이론적, 철학적 기초”. 『스칸디나비아연구』 19, 51-96.
- 신정완(2022). “스웨덴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확장이 의료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스칸디나비아 연구』 30, 141-176.
- 신필균(2011). 『복지국가 스웨덴』. 서울: 후마니타스.
- 안재홍(2013). 『복지국가의 형성과 재편』. 서울: 후마니타스.
- 이헌근(1999). 『제3의 길로서의 스웨덴 정치』.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조돈문(2019). 『함께 잘 사는 나라: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을 찾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조돈문 · 신광영(1998). “노동시장과 계급정치: 스웨덴 모델의 미래: 사회민주당 계급연합전략과 지지기반의 변화”. 『산업노동연구』 3(2), 151-193.
- 주은선(2006). 『연금개혁의 정치』. 파주: 한울.
- 최연혁(2012).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서울: 샘앤파커스.
- Åsard, E. (1980). Employee participation in Sweden 1971-1979: The issue of economic democracy.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1(3), 371-393.
- Barber, W. J. (2008). *Gunnar Myrdal*. London: Palgrave MacMillan.
- Bo, E. D., Finan, F., Folke, O., Persson, T., & Rickne, J. (2022). Economic and social outsiders but political insiders: Sweden’s populist radical right.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90(2), 675-706.
- Burawoy, M. (2005). 2004 ASA presidential address: Public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1), 4-28.
- Burawoy, M. (2022). The status of US sociology: From crisis to renewal. *Critical Sociology*, 48(2), 193-196.
- Camus, J. Y., & Lebourg, N. (2017). *Far-Right Politics in Europe*. Ma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ahlgren, G. (2014). Why public health services? experiences from profit-driven health care reforms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 Services*, 44(3), 507-524.
- Esping-Andersen, G. (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0). *The T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ddens, A. (1998). *The Third Way: A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 Gouldner, A. (1970).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New York: Free Press.
- Hagevi, M. (2022). Dealignment and realignment: The Swedish parliamentary election of 2022. *Journal of the Scandinavian Society of Korea*, (30), 1-40
- Hall, P., & Soskice, D. (Ed.)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rsen, L. T., & Stone, D. (2015). Governing health care through free choice: Neoliberal reforms in Denmark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40(5), 941-70.
- Meidner, R. (1974). *Co-ordination and Solidarity: An Approach to Wage Policy*. Stockholm: LO/The Swedish Workers Union Confederation.
- Meidner, R. (1976). *Employment Investment Funds: An Approach to Collective Capital Formation*. London: Unwin & Allen.
- Meidner, R., & Rehn, G. (1951). *The Trade Union Movement and Full Employment. Report to the LO Congress in 1951*. The Swedis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LO), Stockholm.
- Molinder, J., Karlsson, T., & Enflo, K. (2022). Social democracy and the decline of strike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83, 101420.
- Mudde, C. (2007).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yles, J., & Quadagno, J. (2002). Political theories of the welfare state. *Social Service Review*, 76(1), 34-57.
- O'Connor, J., & Olsen, G. M. (1998). *Power Resource Theory and the Welfare State: A Critical Approach*. Toronto: Toronto University Press.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 OECD (2021). *Building Trust to Reinforce Democracy*. Paris: OECD.
- Pontusson, J., & Kuruvilla, S. (1992). Swedish wage-earner funds: An experiment in economic democracy. *ILR Review*, 45(4), 779-791.
- Prevost, J. G., & Beaud, J. P. (2015). *Statistics, Public Debates, and the State: 1800-1945: A Social, Politic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Numbers*. London: Routledge.
- Shin, K. Y. (1988). The politics of production and earnings inequality: A comparative study of earnings inequality in the USA, Sweden, and Jap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Stephens, J. D. (1979). *The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Torben, I., & Rehm, P. (2022). *Big Data and the Welfare State*. Ma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right, E. O. (1989). The comparative project on class structure and class consciousness: An overview. *Acta Sociologica*, 32(1), 3-22.

성명: 신광영(Shin, Kwang-Yeong)

소속: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E-mail: kyshin@cau.ac.kr

www.kci.go.kr